

“저출생, 생애주기 통합설계 필요”

권익위, 56만건 민원데이터 분석
국민 생활 전반 정책과 밀접 연결
특정 생애단계·개별정책으로 어려워

저출생 문제는 출산·양육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생애주기와 정책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포스텍 사회문화데이터사이언스연구소와 협업해 진행한 ‘저출생 대응을 위한 민원 기반 정책 수요 분석 및 정책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접수된 약 56만 건의 저출생 관련 민원 데이터를 분석해 현행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과 국민 체감도를 점검했다.

분석 대상은 임신·출산·양육·교육을 키워드로 추출한 민원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된 생애주기별 주요 정책이다. 그 결과 저출생 관련 민원은 아동·청소년기에 가장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정책 분야별로는 양육·보육·교육 외에도 고용·노동, 보건·의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민원이 발생해 저출생 문제가 국민 생활 전반의 정책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주기와 정책 분야를 함께 분석한 결과, 임신·출산기에는 불임·난임 지원과 분만 인프라 접근성 등 보건·의료 분야 개선 요구가 컸고, 영유아기에는 보육시설 인력 배치와 안전관리 등 보육 분야, 아동·청소년기에는 급식·방과후 학교·돌봄교실 등 교육 분야의 개선 필

요성이 두드러졌다. 노동시간과 조직문화 등 고용·노동 환경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확인됐다.

연구진은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저출생 문제는 특정 생애 단계나 개별 정책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며, 생애주기와 정책 분야를 동시에 고려한 통합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민권익위는 연구 결과를 관계기관과 공유해 향후 저출생 정책 수립과 개선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이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연구는 국민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정책을 점검한 사례로, 향후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수출기업 애로 ‘무역장벽 119’가 책임진다

산업부, 기존 ‘관세 대응 119’ 개편
관세·비관세 범정부 대응체계 구축

미국의 관세·원산지 검증 강화와 기술규제 등 비관세 장벽이 겹치면서 수출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통합 대응 창구를 확대 개편한다.

산업통상부는 4일부터 기존 ‘관세 대응 119’를 ‘무역장벽 119’로 확대 개편해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아우르는 범정부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3일 밝혔다.

‘관세 대응 119’는 2025년 2월 출범 이후 범정부 관세 상담 창구로 운영돼 왔으며, 지금까지 총 1만570건의 상담을 접수했다. 불확실한 통상환경 속에서 관세를 확인, FTA 적용 여부 검토, 대체 시장 발굴 등 기업 밀착 지원 창구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다.

실제 미국 세관(CBP)의 품목별 관세 통보에 대응해 세율을 50%에서 15%로 낮추거나, FTA 미적용 통보 사안을 해결해 관세를 면제받도록 지원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거뒀다.

다만 최근에는 기술규제 강화, 한국산 제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 확대, 미국 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판결 대응 등 비관세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상담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상담 범위를 대폭 확대한 ‘무역장벽 119’를 통해 ▲CBP 사후 검증 및 관세 환급 대응(정정신고·이의신청) ▲CBP 소명자료(Form 28) 대응 지원 ▲맞춤형 대체 시장 발굴 ▲기술규제·해외인증·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비관세 장벽 대응 상담을 새롭게 제공한다.

아울러 주요 무역장벽 이슈를 정리한

‘무역장벽 리포트’를 발간하고, 관계기관 합동 설명회도 정례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운영 체계도 강화된다. 기존 관세 대응 119 참여 기관에 더해 FTA 통상종합지원센터, TBT 종합지원센터 등 전문기관과 협업 거버넌스를 구축해 범정부 대응력을 높인다.

산업부는 “무역장벽 119로의 개편은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관세 영역을 넘어 기술규제 등 비관세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며 “관세 납부 이후의 검증 대응과 환급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우리 기업이 수출 현장에서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무역장벽 119 상담 신청은 코트라 홈페이지 또는 전용 콜센터(1600-7119)를 통해 가능하다. /세종=한용수 기자

外人근로자 ‘임금체불 보증보험’ 의무화

해수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 법률 대한 설명회로 이해 도와

해양수산부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 법률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예정된 이 설명회는 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주요 내용에 대해 지방정부 담당자·수협·어업인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리다.

개정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상의 임금 지급을 비롯해 상해·질병 보상을 두텁게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호 제도를 법에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 내용에는 차별 금지, 표준계약 체결, 의무보험 가입, 귀국 전 임금 청산 등 외국인 근로자의 보호 장치가 포함됐다.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설명회에서는 의무보험 가입의 구체적 기준과 시점을 중점적으로 안내된다.

법 시행일(2월15일) 이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고용주는 ‘임금체불 보증보험’을 근로 계약의 효력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또 ‘농어업인 안전보험’은 근로 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오는 15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15일 이내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보험금 청구 대행 등 행정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된다. 시·군·구는 상해보험 보험금 청구를 대행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를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임금체불 신고 지원 등도 할 수 있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설명회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어업 현장의 인력 운영도 보다 안정적으로 시행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기후부, 지능형전력망 미래 기술 선포

‘코리아 스마트 그리드 엑스포’ 열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4일부터 사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코리아 스마트그리드 엑스포 2026’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능형전력망 관련 전력 기술의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문 전시회다.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국내 유일의 스마트그리드 전문 전시회다. 스마트그리드는 지능형전력망 기술을 총칭하는 것으로, 전기를 만드는 곳과 쓰는 곳을 정보통신 기술로 연결해 전기의 생산·저장·소비를 실시간으로 관리한다.

올해 전시회 주제는 ‘직류(DC)로 연결하고 인공지능(AI)으로 제어하는 미래에너지’다.

특별전시관 3곳을 구성해 지능형전력망 기술력을 대외에 홍보할 계획이



지난해 2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코리아 스마트그리드 엑스포 2025·일렉스 코리아’ /뉴시스

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전 ▲분산에너지 산업전 ▲전기차 충전 기반 시설 산업전이다.

먼저 ESS 산업전에서는 화학적 안전성과 경제성을 겸비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기반의 ESS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가변속 양수·모듈식 양수발전소 등 다양한 에너지저장기술을 선보인다. /세종=김연세 기자

설 명절 앞두고 ‘항공권·택배·건강식품’ 피해 주의보

소비자원·공정위, 항공권 수수료 확인
택배 파손, 건강식품 상술 주의 당부

설 명절을 앞두고 항공권·택배·건강식품 거래가 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들 3대 품목을 대상으로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1218건, 택배 166건, 건강식품 202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피해구제 건수 대비 비중은 각각 16.4%(항공권), 16.2%(택배), 19.0%(건강식품)에 달한다.

품목별로 보면 항공권 피해가 가장 두드러진다.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7437건 중 절반 이상(58.3%)은 계약해제·취소수수료 분쟁이었다. 해외여행 수요 증가와 함께 온라인 여행사(OTA)



설 연휴를 열흘 정도 앞둔 3일 부산 해운대구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선물 및 제수용 과일을 구입하거나 상인들이 선물용 과일을 포장하고 있다. /뉴시스

를 통한 항공권 구매가 늘면서, 취소 시 과도한 수수료 부과나 환급 지연, 운항 지연·결항에 따른 손해배상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 한 소비자는 여행을 통해 일본 오사카 왕복 항공권 4매를 구매한 뒤 즉시 취소했지만 23만 원가량의 취소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항공권 취소 후 3개월 넘게 환급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택배는 명절 물량 급증에 따른 파손·분실 피해가 집중됐다. 최근 3년간 택배

피해구제 1022건 중 ‘파손·훼손’이 43.8%, ‘분실’이 33.1%를 차지했다. 신선식품이 오배송돼 변질됐음에도 배상이 거부되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

건강식품의 경우 무료체험을 내세운 상술이 문제로 지적됐다. 피해구제 사유의 42.3%가 계약해제·청약철회 분쟁이었으며, 특히 60대 이상 고령자 피해가 전체의 33.2%에 달했다. 포장 개봉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식품부-aT, ‘농할상품권’ 할인판매

설 앞두고 이달 15일까지 실시
인당 최대 10만원 상품권 30% 할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이달 15일까지 대한민국 농할상품권 할인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3일 aT에 따르면 올해 설을 앞두고 소비자들은 1인당 최대 10만 원의 농할상품권을 30% 할인된 가격인 7만 원에 구매할 수 있다. 대한민국 농할상품권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 국산 농축산물의 지속적인 소비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식품부와 aT가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이다.

올해 발행되는 농할상품권은 전국 17개 지역별 상품권으로 지난 2일 순차적 발행을 개시했다. 해당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별 가맹점 정보는 ‘제로페이맵’ 앱을 통해 주변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발행은 65세 이상 회원의 구매편의를 고려해 우선 구매 기간을 별도로 마련하여 진행한다. 65세 이상 구매는 2~8일 기간 진행되며, 출생연도 1961년 이전(1961년 포함)인 회원은 우선 구매가 가능하다. 이후 전 연령대의 구매는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며 총 100억 원 규모의 상품권을 출생 연도와 지역별 판매 규모를 고르게 분배해 다양한 소비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비플레이 등 17개 앱 중 하나를 다운받아 앱 내에서 지방정부별 상품권을 구매하면 된다.

설맞이 발행 취지에 따라 상품권 유효기간은 이달 28일까지로 기간 내 빠른 사용이 필요하며 타인에게 선물은 불가하다. 지방정부별 구매 개시 일자는 공사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